

주간 규제 정보

Vol. 333

2021. 02. 08 ~ 2021. 02. 14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중대형 H형강에도 KS표준 도입한다 3
2.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3
3. 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4
4.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뛰다 5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5.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6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표 7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독일, 2021년 트랜스지방·나트륨·설탕 함량 규제 강화 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중대형 H형강에도 KS표준 도입한다

- 한국산업표준(KS) 개정, H형강 표준치수 82종에서 95종으로 확대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건축비용 절감과 철강수요 확대를 위해 건설 현장의 핵심자재인 H형강* 표준치수를 82종에서 9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 개정안(KS D 3502)을 '21.2.8(월) 고시한다. 중소형 치수에 비해 표준치수가 부족했던 1)대형 치수 8종이 추가되고, 활용도가 가장 높은 2)400mm급 치수가 5종 추가된다.

* H형강은 국내 연간 생산량 약 320만톤, 시장규모 약 2조 4천억원('20년 기준)의 건축구조용 핵심 철강자재

이번 H형강 표준치수 확대로 건설업계는 건축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표준치수가 확대되면, 다양한 규격의 H형강을 적절히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형 치수 확대는 초고층화,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건축산업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400mm급 치수 확대는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 더욱 다양화되어, 제품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설계에 반영하려는 H형강이 KS 표준치수가 아닌 경우, 가장 근접한 상위 규격의 KS 표준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철강업계는 H형강이 다른 건설자재에 비해 내진성능이 우수하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한적인 치수로 인한 설계 비효율이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다.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표준치수 확대로 설계 비효율에 따른 경제성 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이번 표준 개정이 건축구조용 시장에서 H형강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제품 생산 가능성과 수요자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표준치수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5차례의 전문가 검토회의와 업계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철강업체 간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쳐 표준치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산업표준 금속기술심의회 의결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우 국표원장은 "금번 표준치수 확대는 초고층화, 대형화라는 수요산업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표준 개정"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과 산업, 국민을 위한 표준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02.08.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

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K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1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 비대면 서비스, 4차 산업 핵심기술, K-방역 국제표준개발 중점 지원 -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통한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도구로써 국제표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디지털뉴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 신규 R&D 과제를 '21년 2월 8일(월) 공고한다고 밝혔다. '21년 표기력사업은 ① 비대면 서비스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② K-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③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기력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및 사실상표준화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등록하는 표준연구개발과 표준인력양성, 인증방안연구 등 표준화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이다. '20년 국표원은 '19.6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따라 BIG3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소부장 등에 총 335억원(추경 30억원 포함)을 투자하였고, 39개 국제표준 신규제안(NP)이 채택*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자율차의 보행자 충돌방지시스템 성능평가방법(ISO 22733-2),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IEC 63288),

플렉서블 반도체소자용 유연저항메모리 성능평가방법(IEC 62951-9) 등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진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K-방역모델에 대한 국

제표준개발 * 에 착수하였다.

-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ISO 5258),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 요구사항(ISO 6028) 등 4개 표준은 신규제안(NP)이 기 채택되어 국제표준화가 진행중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374억원을 투입, 이중 130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분야인 비대면 의료·유통·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와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이를 위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94억원(54개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 * 비대면 유통·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기반조성, 영상협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QoS/QoE 국제표준 개발, 산업지능화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성능지표 개발 및 신뢰성 표준기반조성 등

또한 소재·부품·장비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9억원(7개 과제)*, 5억원(4개 과제)* * 을 각각 지원한다.

- * 직류 보호계전기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기술 국제표준개발, 전기전자제품 내 고분자 소재의 염소계 난연재 시험방법 국제표준개발 등

- * * 수소 생산용 수전해 전극재료 특성 및 내구성 평가기술의 국제표준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 압연 강판 및 고망간강 플랜지 국제표준개발

'20년 제3차 추경(30억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K-방역모델 및 관련 헬스케어 분야 국제표준개발도 4~5년이 걸리는 국제표준 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표준개발 활동 외 주요 선진국과의 표준화협력 및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은 『국제표준화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2개 부처 위탁관리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제표준화활동 지원을 식약처, 기상청 소관 분야까지 확대하여 17억원(5개 과제)을 지원한다.

- * 부처별 위탁분야 : (식약처) 의료기기, 체외진단 등, (환경부) 배기가스, 수질, 폐기물, (기상청) 태양에너지, 기상학(풍속, 공기온도), (과기부) 정보기술 등

특히 사회적 이슈가 큰 K-방역(의료·바이오·헬스),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 환경부 소관 분야에는 각각 올해 7억원을 포함하여 4년간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년 표기력사업의 국제표준개발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등 부처 간 표준화협력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범부처 표준화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월『연구성과평가법』개정 시행으로 표준이 특허, 논문과 같이 정부 R&D 주요 성과로 인정되는 만큼 기업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신규 과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뚫다

「비대면 경제, K-방역모델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뚫다

- 국가기술표준원, 「2021년도 국제표준화활동 지원사업」추진 -

비대면 경제, K-방역모델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①민간 표준 전문가의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및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IEEE 등) 회의 참가 ②주요 국제표

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③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21년도 국제 표준활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지난 해 코로나19 인해 해외출장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를 개최하고 「한-미 표준포럼」, 「한-독 표준 컨퍼런스」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42건의 국제표준 제정, 76건의 신규 작업표준안(NP) 채택의 성과를 거뒀으며, 제84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및 표준화관리위원회(SMB)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의장·간사 등 임원 수는 '19년 216명에서 '20년에는 237명으로 증가하여 우리기술이 국제표준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 임원수(명) '16 (180) → '17 (190) → '18 (208)→ '19 (218)→ '20 (237)

우선, 2021년 국표원은 민간 전문가 295명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작업반 포함) 회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 개최 시에는 영상회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현지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등의 민간 전문가들의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한다. 시장 중심의 혁신기술을 주도하는 사실상표준화기구도 ISO, IEC 등의 공적표준화기구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 총회, 표준화 회의 등 약 19건의 국제표준화회의 개최를 지원한다. IEC YP(Young Professionals) 교육 프로그램*(5월), 한중일 3개국 표준협력 포럼(6월), 국제표준올림피아드(8월) 등의 행사도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세계 각국의 젊고(만25세~38세) 유망한 전기전자분야 표준 인재를 차세대 국제표준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국제표준화기구 개발도상국정책위원회(ISO DEVCO,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표준적합성소위원회(APEC/SCSC, 2월,10월) 뿐만 아니라 ISO와 IEC의 총회에 각각 참가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기술 외교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 전문가 모임인 「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위해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아울러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과 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무대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글로벌 표준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5.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21년 1월 5일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

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의 지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의 상향 조정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를 포함함(제2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4 신설).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제33조의3제3항 신설).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제45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siSeq=228129&sid=&efYd=20210706&chrCsCd=010202&urlMde=lsffInfoR&viewCs=lsRvsDdrfrcR&encYrChk=0#>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표

2020년 12월 29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개정이유는 연구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승인 신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1조의2 신설)
 -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정하였습니다.
-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제25조의 제2 신설)

-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7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를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의 확대 (제38조 제1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 (제39조의2 신설)

-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는 자 등의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는 자 등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의 업무에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계획서의 제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등의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독일, 2021년 트랜스지방·나트륨·설탕 함량 규제 강화

- 식품 내 트랜스지방 및 나트륨 100g 당 2g 규제, 영유아용 음료 설탕 첨가 금지 -
- 한국 식품 기업, 수출 시 첨가물 함량 주의 필요 -

2021년부터 EU는 당뇨병, 비만 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트랜스지방 및 나트륨 함량 제한, 어린이 음료의 설탕 금지 등 식품 규제를 강화한다. EU에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규정을 유념하고 필요할 경우 식품에 포함하는 트랜스지방·나트륨·설탕 양을 조절해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대독일·대EU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독일 식료품 수출액은 3년 연속 증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국의 식품 산업이 독일에 수출한 총액은 약 4,420만 달러이다. 한국의 대 독일 수출은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주요 대상국은 아니지만, 전년도와 비교해도 12%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분야이다.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1위는 빵 등 곡물 및 곡분(곡물가루)을 이용한 조제품(HS코드 19)으로 1,780만 달러이고, 2019년 대비 64% 증가한 라면 제품의 역할이 컸다. 2위는 채소·과일 조제품(HS코드 20)으로 수출액은 약 972만 달러이다. 한류를 타고 작은 규모이나 확산세에 있는 김치 제품의 47.9%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 3위는 기타 식료품 군(HS코드 21)으로 약 724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이루었다. 이에 건강식 및 환경 이슈와 함께 확산 중인 대체육류(일명 콩고기) 시장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육·어류조제품(HS코드 16), 음료·주류·식초(HS코드 22), 과자류 (HS코드 17) 등이 백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제품군이다. 해당 증가세를 이어 가기 위해 2021년부터 주목해야 하는 식품 관련 규제가 있다.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함량 관련 규제와 육류조제품 제품 수출 조건 변화 등이 그 예로 2021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한국의대독일식품수출액
(단위: 달러, %)

HS코드	품목		2018년	2019년	2020
19	빵 등 곡물 조제품	수출액	11,485,635	13,352,568	17,802,464
		증가율	30.9	16.25	33.3
20	채소·과일 조제품	수출액	1,687,091	3,778,959	9,726,181
		증가율	13.8	124.0	157.4
21	기타 식료품	수출액	10,248,811	9,405,421	7,242,072
		증가율	0.1	-8.2	-23.0
16	육·어류 조제품	수출액	1,832,588	1,934,637	1,844,657
		증가율	8.8	5.8	-4.6
총수입량			34,271,188	39,156,006	44,119,280
증가율			18.0	14.2	12.7

자료원 : GTA(2021.2.)

연방 식품·농업부(BMEL), 트랜스지방·소금·설탕 규제 강화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시민의 건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의 타도이스 톤니스(Dr. Thaddäus Tönnies)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40년 독일 시민의 약 16%인 1,230만 명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설탕·소금·트랜스지방 등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랜스지방 관련 규제는 2018년 12월에 연방정부가 의결한 “식생활 중 설탕·소금·트랜스 지방 감량 정책(NRI)”이 있다.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들어가기 쉬운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100g당 2g으로 조정하고 함유량을 라벨링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트랜스지방의 하루 섭취량이 2.2g을 넘어선 안 된다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2021년 4월 2일부터 소매용 제품에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B2B 거래에서는 사전 고지가 의무는 아니다.

트랜스지방은 주로 가공 중 첨가되는 수소가 식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기름과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식물성 지방을 가공할 때 해당 제품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성화되어 냄새가 변형되고, 맛과 빛깔이 변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소가 주로 첨가되고 있다.

독일 영양학회(DGE)는 독일 유통 제품의 경우 우유 제품, 양 치즈, 마가린 등에 포함되는 트랜스지방의 양을 적정선으로 줄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튀긴 감자 등 감자 가공제품, 특정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나, 제과, 피자류 식품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한국 수출 품목에는 라면, 과자, 비스킷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를 위해 연방정부는 라벨링에 대해서 식이 식품규제법규(DiaetV)를 통해 위반 시 행정 제재를 가

하고, 트랜스지방을 100g당 2g 초과해서 함유하는 제품의 시장 출시의 금지를 위해서는 주요 유통업체 및 식품산업 기업과의 협력 의무 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시도하고 있다.

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100g당 2g으로 제한 통해 소금 섭취량 5g 미만으로 유도

연방정부가 의결한 “식생활 중 설탕·소금·트랜스지방 감량 정책(NRI)”에 트랜스지방 규제처럼 식료품에서의 소금 함량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양이 5g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는데, 이를 위해 소금의 주요 성분인 나트륨과 아이오딘산 나트륨 등의 함량을 100g 당 2g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 식품 연맹(Lebensmittelverband Deutschland)에 따르면, 독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며 관련 함유량의 라벨링 의무에 더 초점이 맞춰진 조치이다. 연방정부는 식이 식품규제법규 (DiaetV)를 통해 라벨링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가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냉동 피자의 경우 관련 수치를 2025년까지 100g당 1.25g으로 낮추는 것을 권고했는데, 조사 전문가 P 씨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는 관련 업계 협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자의 평균 함량 감소 기준도 피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살라미 피자의 경우 현재 소금 1.5g, 참치 피자의 경우 1.2g이 될 수 있고 해당 목표치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영유아용 음료에 설탕 첨가 금지 및 형사처벌

독일 정부는 2020년 11월부터 생후 약 3년(1,000일) 동안 영유아가 섭취하는 용도로 제작되는 음료 제품에 설탕 첨가를 금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라벨링을 해야 하는 규정도 발표했으며, 당뇨 및 비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일 주스 및 청량음료 및 차 규제법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설탕 외에도 꿀, 과즙, 시럽, 농축 주스의 첨가도 금지된다. 과일 주스 및 청량음료 및 차 규제 법령은 해당 첨가 금지를 어기고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다.

라벨링에서 제조사는 구매자와 이용자에 대해 영유아용 음료의 구매 후에 해당 제품에 설탕 등을 첨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무설탕 차도 생후 4개월이 되어야만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규정도 라벨링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라벨링 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서 추구하는 최종적 목표는 2025년까지 과일·청량음료에 첨가된 설탕류 15% 감소, 어린이용 시리얼(콘플레이크류)에 첨가된 설탕 20% 감소, 어린이용 우유 가공품에 첨가된 설탕류의 15% 감소이다. 그리하면 연방정부는 성인 기준 1일 설탕 섭취량이 50g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정부의설탕첨가량감소목표
(단위: %)



자료: BMEL(2021.1.)

시사점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시민 건강을 위해 트랜스지방·나트륨·설탕 등 식료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의 함량 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특히 영유아 보호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현지 진출 국내기업 역시 이번 변동 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의 경우 생산 과정을 수정해야 더 나은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증가세가 뚜렷한 라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김치, 그리고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대체육류(일명 콩고기) 수출 기업의 경우 독일 현지 유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라벨링을 부착하는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원 : BMJ홈페이지, 독일연방 식품 농업부(BMEL) 홈페이지, GTA 홈페이지, 독일연방 법무부(BMJV) 홈페이지, Max Rubner Institut(MRI) 홈페이지, 독일 영양학회(DGE) 홈페이지, 독일 식품 연맹 (Lebensmittelverband Deutschland)홈페이지,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출처 ([KOTRA해의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